

# 김정일 변호사 행정법 강의계획서

“21년간의 강의 노하우, 名聲은 헛되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암기자료를 통한 중요쟁점에 대한 확실한 암기 →  
행정법연습사례 및 모의고사 해설을 활용한 구체적인 논점 추출 방법에 대한 학습과 숙달 →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안포섭능력의 향상으로  
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실력을 완성하십시오.”

■ ■ 담 당 김정일 변호사

■ ■ 강의일정 2018년 4/9(월) ~ 5/1(화), 총 20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1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10분 ~ 5시40분  
※ 실강반도 필기자료가 제공되며, 매일 강의 종료 후 개별질문 및 답안강평을 진행합니다.

[당일 저녁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6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6시 ~ 7시 / (강의) 7시10분 ~ 10시40분

[익일 오전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8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10분 ~ 12시40분

■ ■ 강의교재 각자기본서 및 법전 +  
행정법 핵심암기장(김정일, 근간, 서점구매) +  
행정법 쟁점별 답안요약자료(무료제공) + 중요사례문제 및 기출문제(매일 무료제공)  
2016~2018년 최신판례자료(무료제공) + 기타사례자료(무료제공)

■ ■ 강의진행  
특이점 매회 시험마다 소정의 답안지를 강사가 직접 채점한 후 강의시간에 이를 반영하여 강평하며,  
답안작성에 관련한 구체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강의 종료 후 1시간동안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안지에 대한 개인강평을 진행하여 고득점을 위한 답안작성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교재소개

### 1. 행정법 핵심암기장(정식출간, 서점구매)

: 합격을 위해, 필요한 만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설과 판례를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요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출제분석 및 주요이론 전반에 대한 맵핑을 완성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2018년 박근성, 홍정선, 정하중 교수님의 기본서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 및 고득점을 위해 확인해야할 검토자료, 2017년~2018년 최신판례 등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핵심암기장을 꼼꼼히 암기하신다면 답안지를 서술할 때 막히는 부분 없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임을 자신합니다.

### 2. 행정법 쟁점별 답안요약자료(무료제공)

: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답안지에 서술할 분량을 답안지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행정법 핵심암기장을 빠르게 여러 번 보신 후 이 자료를 중심으로 암기하신다면 훨씬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행정법연습사례 중 중요사례문제 및 기출문제(무료제공)

: 행정법연습에 있는 문제 중 2순환 때 풀지 않은 사례문제와 반드시 풀어봐야 할 기출문제를 자료로 제공합니다. 강의시간에 나누어 드린 사례문제를 열심히 풀이하며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시험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5급공채 기출문제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위 사례자료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4. 2016, 2017, 2018년 최신판례자료(무료제공)

: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기 가장 좋은 부분은 판례인 바, 최근 3년간의 판례를 교과서 목차별로 정리하였으므로 판례를 통해 행정법 전체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사례자료 등(무료제공)

※ 이번 3순환강의의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일일이 확인해가며 교수님 기본서에서 변경된 내용들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모의고사는 신작구성을 원칙으로 최근 출제경향을 적극 반영하여 출제하였습니다.

## ■ ■ 강의목표

1. 먼저 3순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암기입니다. 행정법의 중요쟁점에 대하여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답안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암기자료 및 이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중요쟁점에 대하여 확실히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사례문제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쟁점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어떠한 쟁점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3순환에서는, **행정법연습사례 및 모의고사 해설 등을 통해 '사례에서 어떠한 문구가 나오면 어떤 쟁점을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논점추출방법을 확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안포섭능력의 향상**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례문제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답안점수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안포섭이 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3순환 강의를 통해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 고득점 획득에 필수요소인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과 검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4월 9일 (월)	행정법의 전체체계,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 제 2 회	4월 10일 (화)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범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신의성실, 실권의 법리), 행정법의 효력(소급입법 및 소급적용금지원칙)
■ 제 3 회	4월 11일 (수)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공권의 확대화경향(제3유형에서의 원고적격충족여부)
■ 제 4 회	4월 12일 (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극적 공권(협회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하자의 효과,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제 5 회	4월 13일 (금)	행정입법(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제 6 회	4월 14일 (토)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과 구별실익,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공증, 제3자효적 행정행위)
■ 제 7 회	4월 16일 (월)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제 8 회	4월 17일 (화)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여부 및 그 정도, 하자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 제 9 회	4월 18일 (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 제 10 회	4월 19일 (목)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 제 11 회	4월 20일 (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해석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 제 12 회	4월 21일 (토)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선택적청구권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 제 13 회	4월 23일 (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해석 및 제6조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 손실보상 전반
■ 제 14 회	4월 24일 (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I
■ 제 15 회	4월 25일 (수)	행정소송 II
■ 제 16 회	4월 26일 (목)	행정소송 III
■ 제 17 회	4월 27일 (금)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 제 18 회	4월 28일 (토)	지방자치법
■ 제 19 회	4월 30일 (월)	경찰행정법, 공물법
■ 제 20 회	5월 1일 (화)	영조물법, 공기업법, 토지행정법, 공용부담법, 경제행정법, 환경행정법

항상 행복하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b>법률유보원칙(B)</b>	
2		
3	<b>I. 법률유보의 의의</b>	
4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부가 일정영역의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률	
5	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6		
7	<b>II. 법률유보의 근거</b>	
8	법률유보의 이론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법	
9	치국가 원리, 그리고 기본권보장원리에서 나온다.	
10		
11	<b>III. 법률유보 범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b>	
1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유보	
13	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침해유	
14	보설은 입헌군주제 하에서 타협의 소산이었다는 점에서, 급부행	
15	정유보설과 전부유보설은 급부영역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면	
16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중요사	
17	항유보설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중요사항인지에 따라 결정하	
18	여야 할 것이다. 즉, 침해행정에 대해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	
19	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침해행정이외의 급부	
20	행정이나 기타 행정영역에 대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영	
21	역과 행정작용의 성질, 기본권관련성, 규율사항이 국민생활에서	
22	갖고 있는 실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23	것이다.	
24		
25	<b>IV. 급부행정에 법률유보가 필요한지 여부</b>	
26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부	
27	행정은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근거가 있	
28	는 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단, 국민에게 침	
29	익적 효과를 수반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및	
30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지	
31	모르는 경우에는 중요한 영역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	
32	아야 한다.	
	제2차시험답안지	중앙인사위원회

1	<b>평등원칙(B)</b>	
2		
3	<b>I. 의의</b>	
4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5	차별적 행정작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6		
7	<b>II. 근거</b>	
8	일부견해는 평등원칙을 성문법원으로 보고, 일부견해는 평등원칙	
9	을 헌법 제11조로부터 도출되는 불문법원으로 본다.	
10		
11	<b>III. 요건</b>	
12	어떠한 행정작용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위해선, 첫째	
13	동일한 사안일 것, 둘째 당해 행정작용이 차별적 행정작용에 해	
14	당될 것, 셋째,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등의 요	
15	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합리적 차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6	차별목적에 정당성이 있는가, 차별한 행정작용이 목적달성에 적	
17	합한 수단인가, 차별한 행정작용이 차별목적달성을 위한 최소침	
18	해수단인가, 차별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	
19	이 더 크다 등을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판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21	원칙에 반하고...” 라고 판시하고 있다.	
22		
23	<b>IV. 한계 - 위법앞에 평등없다.</b>	
24	위법행위에 대하여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25	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6		
27		
28		
29		
30		
31		
32		
	제2차시험답안지	중앙인사위원회

1	<b>자기구속원칙(A)</b>	
2		
3	<b>I. 자기구속원칙의 의의</b>	
4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의 자유영역에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5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선행관행과 동일한 행	
6	정작용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7		
8	<b>II. 인정근거</b>	
9	자기구속원칙의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평등원칙으로 본다. 이	
10	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	
11	하여 자기구속원칙을 인정하였다.	
12		
13	<b>III. 적용요건</b>	
14		
15	<b>1. 행정부의 자유영역(재량행위 등)일 것</b>	
16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의 자유영역,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	
17	운 영역이나 재량영역 및 판단여지 영역에 적용된다.	
18		
19	<b>2. 행정선례의 존재요부</b>	
20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하나, 재량준칙을 예기된 행정관행으로	
21	파악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22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필요설이 타당하다. 판례	
23	도 필요설 입장에서 행정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		
25	<b>3. 선행관행과 동일한 사안일 것</b>	
26		
27	<b>IV. 한 계</b>	
28		
29	<b>1. 위법한 선행관행과 자기구속</b>	
30		
31	<b>2. 사정변경</b>	
32		
	제2차시험답안지	중앙인사위원회